

박근혜정부 지역정책 '똥구름 잡기'

예산대책·실행계획 없이 청와대·부처 '똥 목소리' 광주·전남 신규사업 예산심의서 줄줄이 탈락 위기

박근혜 정부가 지방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광주·전남은 물론 영남지역마저 '지방소외'를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지역 대선공약사업을 제시해 놓고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똥 목소리'를 내는 등 지방정책에 대해서만 유독 갈팡질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시의 내년도 신규사업 들마저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줄줄이 탈락할 위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암담한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167개(광주·전남 각 11개)의 지방공약 가계부를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재부는

신규사업은 경제성(예비타당성 조사)을 검토한 후 재기획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가 하면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10개 중 9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이중적 행태로 비쳐져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첫 지방 업무보고 방문지인 강원도에서 "(지방공약사업은) 경제성보다 국가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지역정책(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체도 불명확한 지역 대선공약에 매달리는 사이 광주·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내년도 중요 신규사업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최근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서 요청한 광주시 신규사업 14건을 모두 문제사업으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이미 추진중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비롯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실시되는 기재부의 2차 심의에서 해당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추세여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MB정권 내내 공들여온 광주~지탈콘텐츠사업 클러스터 조성(1758억원) 등 4개 사업(총 사업비

9636억원)도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전남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정압박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무상보육 확대로 지방비 부담액을 크게 늘린 상황에서 지방세인 취득세마저 인하하기로 하면서 지방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하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해왔지만, 현재로서는 말뿐인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지역발전 정책(공약사업)이 그 겉은 화려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게 지역여론이다"면서 "차질 말의 선감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로서는 광주·전남의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lucky@kwangju.co.kr



상상력이 팍팍... '이야기하는 사물전' 30일 광주신세계갤러리 1층 광장에 '물고기의 꿈' '앵무새 케이지' 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설치작품이 전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여름방학을 맞아 준비한 '이야기하는 사물전'은 다음달 21일까지 열린다. >관련기사 12면

"유치확정 국제대회 정부지원 배제 소급 안돼"

당정 국제대회 지원 법 개정 추진...민주당 반발 "세계수영선수권 재경 지원 불가 즉각 철회해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광주시가 유치한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광주일보 30일자 4면)을 보이자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당정이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올림픽·아시안게임·월드컵·유니버시아드·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 등 지원 대회명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방침을 정하면서 F1대회 등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나 단체에 맞으면 된다"면서 "법적 판단과 재경지원에 얽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정부는 이미 총리와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불가 방침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총리와 문화부장관이 문서를 보증하는 약속에 따른 정당한 재정지원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문서 위조 문제는 정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 판단에 맞으면 된다"면서 "법적 판단과 재경지원에 얽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정부는 이미 총리와

문화부장관 명의의 정부보증서를 통해 모든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표명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대회 외에는 정부지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정철의 뜻을 했다. 이는 F1 등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나 유치가 확정된 대회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는 문제 등의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매우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운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광주가 대회를 유치한 만큼 그동안 불거졌던 문제는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중앙정부는 전례에 맞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합리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면서 "성공 개최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해자 최고위원도 이날 보

도자료를 내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결과 BC 1.7(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로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얻었고, 시의회의 동의뿐만 아니라, 대한수영연맹과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과정까지 모두 거쳤다"면서 "광주시가 유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마쳐 이런 과정을 누락해서 (어제 방정철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안을 만든 것인 바 브리핑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한 광옥 위원장도 언론인터뷰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광주시가) 어렵게 유치한 행사인 만큼 대회 개최에 지장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서 위조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이 문제는 그것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확장·이전
문의 : 062)226-0001

Mercedes-Benz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문의 :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8월호

7월 27일 발매

이영경 2막의 열정, 실버 스캔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기획안 "이의 있습니다"

특집

2막의 열정, 실버 스캔들

시인, 영화감독, 바리스타, 미술관 도슨트로 '제2의 청춘' 즐기는 실버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기획안 "이의 있습니다"

문광부 설계에 대한 반론과 대안

예향 초대석 | 우리 음악의 당당한 자존심 가야금 명인 황병기

대곡 같은 음악 철학과 작품 이야기

시인 안도현

세상 향해 흐르는 시인의 시심과 '詩行일치'의 삶

"무대는 우리의 운명"

손잡고 꿈의 한길 걸어가는 연극인 부부 오성완 이당금

특별한 축제

2013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올 가을 광주에서 만나는 세계적 뮤지션들

스타 데이트

'백년의 유산' 악역 연기로 주목받은 광주출신 탤런트 윤아정

문화역사 기획

황진이 앞자리 매창의 문학과 추억을 만나는 부안 매창공원과 변산반도